

여수광양항만공, 정규직 전환 반복 논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올해 초 100여 명의 비정규직 특수경비 직원의 정규직화를 추진했으나 돌연 이를 반복하려고 시도해 논란이다.

5월31일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말 자회사인 여수광양항만관리(주)를 설립해 10개 용역업체 비정규직 직원 157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추진 방침에 따른 것이다.

공사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는 공공기관 최초라는 수식어와 함께 홍보했으며, 이 같은 정규직 전환 합의는 고용노동부의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자회사 통해 전환한 정규직 뒤집기 시도 올해초 102명 정규직 전환, 없던일 되듯 항만공사 “인건비 등 비용가중, 확정아냐”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해 말 계약이 끝난 특수경비와 시설관리 용역 근로자 10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 절차를 마쳤다.

올해 나머지 55명의 대한 정규직화도 추진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들의 정규직 전환은 지난 3월 열린 광양항 보안협의회에서 재동이 걸렸다.

직원들의 소속이 자회사가 아닌 한국국제터미널(주) 세방, C대한통

운 등 항만 운영사로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상정됐기 때문이다.

공사는 특수경비 직원들이 근무하는 조소에 업무 수행 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게시해 직원들의 의혹을 사기도 했다.

올해 초 정규직으로 전환한 한 직원은 “정부 시책에 따라 정규직이 됐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절반 이상을 운영사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측은 이에 대해 “진용부두에 배치된 특수경비 50명 정도의 인건비를 100% 운영사가 부담해야 함에도 현재 70%만 부담하고 있다”며 “매월 4000만 원 가량의 비용 부담이 있어 협의 중이고 확정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계획보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문제와 부대비용의 상승 등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보안 업무는 진용부두를 사용하고 있는 운영사가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 등 해결을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관리 주체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뇌경색 환자 MRI로 보험사기 50대 기소

뇌경색 환자의 MRI(자기공명영상) 영상을 이용,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50대의 추가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배장대)는 다른 환자의 MRI 영상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인 뒤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사로부터 관련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50대 A 씨를 기소했다고 5월31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8월 뇌경색 환자의 MRI 영상을 자신의 것처럼 병원에 제출, 허위 뇌경색 진단을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10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3월 다른 환자의 MRI 영상으로 허위 입원한 지인 B 씨가 타낸 보험금을 나눠 가진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그 동안 A 씨의 여죄를 수사하던 검찰은 A 씨의 뇌 MRI 촬영을 위한 감정 영장까지 발부받아 A 씨의 추가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A 씨가 다른 환자의 MRI 영상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진도서 승합차량 넘어져...3명 부상

5월30일 오후 7시34분께 진도군 근내면 제1 진도대교 입구에서 A(76)씨가 운전하던 승합차량이 신호등 기둥을 받든 뒤 왼쪽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B(66·여) 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운전자와 또다른 동승자 C(75·여)씨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제주서 중국인 살해한 용의자 3명 검거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지역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인 중국인들이 같은 국적 근로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용의자 5명 중 3명을 검거하고, 2명을 추적 중이라고 5월3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0시7분께 제주도 연동면의 한 빌라 3층에서 중국인 피모(35)씨가 피를 흘리며 숨져 있는 것을 동거하던 리모씨(26·여)가 발견해 119에 신고해 살인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피씨가 살해된 것으로 보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중국인 4명이 같은 시각 빌라 주변을 빠져 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살인시간 용의자로 특정하고 제주공항 여객청사 3층에서 잠복하다 폐쇄회로와 같은 복장에 인장착의를 한 송모씨(41) 등 중국인 3명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공범이 1명 더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나머지 용의자 2명을 ㉔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검거한 3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대낮 중학교 들어가 춤추던 먹방 BJ 입건

아프리카TV에서 ‘요베비’라는 이름으로 ‘먹방’ BJ를 하는 20대 여성이 경기 안산의 한 중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해 민소매 차림으로 춤을 추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이모(2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월31일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1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중학교에 들어가 4층 복도에서 여러 학생이 보는 가운데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춤을 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한 시청자가 사이버머니 벌종선 500개(개당 110원)를 선물하자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를 벗고 민소매만 입고 춤을 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목격한 교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 이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씨는 중학교 인근에서 먹방을 진행하다가 교내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에서 방송을 하고 지나가다가 자신의 모교여서 들어가게 됐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전남도, 강진의료원 ‘태움’ 논란 조사 착수

전남도가 강진의료원 간부 간호사의 ‘태움’과 갑질 주장 논란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5월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최근 전남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부 간호사의 태움과 갑질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태움은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일컫는 은어로, 선배 간호사가 후배를 교육하면서 ‘제가 될 때까지 활활 태운다’는 뜻을 담고 있다.

청원서에는 “간호과정의 태움 때문에 의료원에서 그만 둔 간호사만 10명이 넘는다고”며 “간호 과정은 일이 서툰 신규 간호사에게 그만 들 거면 빨리 그만 뒤라”, “찍히면 기만두지 않았다” 등의 폭언을 일삼고, 마음에 들지 않는 간호사에게 야간 근무(밤 11시~오전 7시) 위주로 스케줄을 짜는 식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해당 간부 간호사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간호사 태움으로 가장한 보복이다”면서 “평소에 잘못된 관행을 말하고 동참하지 않는 저를 대다수의 직원들이 내부고발자로 추측하고 심한 때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양측의 주장이 맞서 있어 현지에 직원을 급파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강제철거 노동자상 5월31일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인근에서 동구청 직원 등이 인도 한복판에 놓여진 강제철거 노동자상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광주시의원 후보 55%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답변 회피”

시민단체 “유권자 알권리 무시” 지적

6·13 지방선거 광주시의원 출마 후보 중 55%가 시민단체의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 의견’을 묻는 정책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5월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의원 지역구 후보자(비례후보 제외) 47명을 대상으로 새마을장학금 조례 존폐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결과 21명(45%)만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각 정당에 몇 차례 협조를 구했지만 응답률이 저조해 설문 마감 시한을 한 차례 연기(5월 19일~6월28일)했다”며 “이 과정에도 응답률이 절반을 넘지 못한 것은

유권자 알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속 정당별 응답률은 ▲더불어민주당 36%(20명 중 7명 응답) ▲바른미래당 29%(7명 중 2명 응답) ▲민주평화당 42%(12명 중 5명 응답) ▲민중당 85%(6명 중 5명 응답)이며, 무소속 후보자는 2명 모두(100%)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 즉각 폐기 입장을 밝힌 후보자는 10명이었고, ‘향후 시민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마을 장학금이 조례에 의해서만 운영(시비 50%+구비 50%)되고 있는데도, ‘국비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거나 ‘전 국민적 동

의를 구해야 한다’ ‘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자생 능력을 길러 스스로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 문서답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특히 응답률이 35%에 그친 집권여당 민주당은 유권자 정책질의의 운동을 무시했다.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며 “촛불 민심을 받들어 적폐 청산에 앞장서겠다고 하더니 특권에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에서 최근 4년 간(2014~2017년)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4071명의 자녀 572명에게 지급됐다.

광주시가 운영 중인 빛고을장학재단의 장학금은 광주 시민 146만명(58만 9232가구) 중 1028명만 받았다.

서은홍 기자

